

국가 정체성은 촛불 민심에 있다

정부 반대는 자유국가의 민주적 권리다 공안정국 조성기도 중단하라

이명박은 6월 24일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 폭력 시위는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 이로써 이명박이 청와대 뒷산에서 “빠져린 반성”은커녕 야비한 꿈소와 반격만 궁리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지난 5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촛불 항쟁은 기적을 만들어 왔다. 대표적 보수 논객인 중앙대

교수 이상돈은 촛불집회를 보고 “보수는 이제 마지막으로 패배하고 있다”며 이명박 퇴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6월 10일 1백만 촛불은 취임 4개월 만에 이명박 퇴진 가능성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조선일보>도 촛불 항쟁이 “국가간 공식 협정을 사후에 바꾸도록 했[고] … 대통령이 두 번이나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 사과하게

만들었고, 청와대 참모진을 출범 1백17일 만에 무너지게 [했]고 … 대통령은 대운하를 포기했고, ‘수도·가스·전기·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썼다. 물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간 벌기용 사기극이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입하지 않겠다는 말은 “촛불이 꺼질 때까지”만 수입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대운

하와 물·전기·가스·의료 민영화도 “촛불이 꺼질 때까지” 유보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촛불 항쟁은 6월 10일 1백만 결집을 발판으로 더 과감하게 전진해야 한다. 대운하, 경쟁 교육, 방송 장악, 물가 인상, 민영화 등의 배후이고 쇠고기 재협상조차 거부하는 이명박의 퇴진을 요구하며 단호한 투쟁에 나선다면 촛불은 더 크게 활활 타오를 것이다.

» 3면으로 이어짐



우석균 칼럼

- 추가협상도 사기다

4~5면



‘안티 이명박’ 카페
민석준 회원 인터뷰

“이명박 퇴진이
가장 근본적 의제입니다”

3면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보여주는
의료 민영화의 미래

2면



비정규직 악법
시행 1년과 확대 적용

8면

뉴욕으로 변진 촛불

7면

독자들의 편지

6~7면

<맞불> 웹사이트를
http://www.counterfire.or.kr 방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지난번에 분신한 이병렬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소속 … 참 희한하죠. 실제로 민노총과 민노당은 분신을 시도하면 평생 먹고살 수 있는 돈을 보장해 줘요.”

— 조갑제닷컴 김성욱의 극악한 망언

“선동세력이 방송을 장악하고, 난동세력은 국가의 중추지역을 점령하고, 대통령은 이들 세력에 굴복하여 공권력 투입을 포기한 상태. … 이를 ‘진행중인 신종 쿠데타’라고 규정한다면 과연 과장인가?”

— 극우익 조갑제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보수 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 강연회, 포럼 등에 초청되어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 때마다 서글프게 생각했던 것은 … ‘50대 중반의 원로 교수’인 내가 ‘젊은이’ 취급을 받은 것이다. … 어르신들은 또한 <조선일보>의 김대중, 류근일 칼럼을 열심히 읽고, 조갑제 선생 책을 사서 탐독한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런 글을 읽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 우파 논객 이상돈의 고백

“조중동이 신문이면 벼룩시장은 바이블이고, 교차로는 코란이다. 조중동이 신문이면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팔만대장경이다.”

— 한 네티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거짓말을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민다. 입만 열면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 전 농림부 장관 김성훈

“뉴라이트가 전 국민의 80퍼센트가 지지하는 쇠고기 촛불집회의 반대편에서 서 … 궤멸을 자청하고 있다. … 하는 짓이 어찌 이리 저능아 같은 짓이나. … 제발 삽질 좀 하지 말라.”

— 박사모

“이명박 정부의 방송 통제를 막아 내야 합니다”

이명박 방송특보 출신 구본홍의 YTN 사장 취임에 반대해 투쟁하고 있는 **현덕수 YTN노조 위원장**과 전화 인터뷰 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은 ‘조중동의 달콤한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방송에는 일부 불만을 갖고 있었고, 방송 장악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지요.

“YTN은 하루종일 반복해서 뉴스를 내보내 방송에서 보도의 흐름과 의제 설정에 강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YTN을 통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조중동의 달콤한 맛

“그러나 YTN 주주의 58퍼센

이명박의 ‘형님뉴스’ 만들기에 맞서 투쟁에 나선 YTN 노동자들

트 이상이 공기업이거나 공기업 성격을 가진 주주입니다. YTN은 공영방송처럼 공공성 실현을 최우선의 과제로 봐야 합니다.

“지난 5월 29일 구본홍 사장 내정을 결정하는 이사회 점거를 계기로 노조 집행부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이 투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6월 5일에는



위험한 햄버거의 무서운 진실

승주민들에게 강요했던 것은 분통터지는 일이다.

맥도날드

그렇다고 미국에서 유통되는 맥도날드 등의 패스트푸드가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니다. 미국 도축장에서 쓰는 치아감별법으로는 ‘30개월 이상’ 여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없다. 게다가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분뇨더미 축사와 불결한 도축장은 광우병뿐 아니라 각종 병원균 오염에도 취약하다. 2년 동안 미국 패스트푸드 산업을 탐사 취재한 에릭 솔로서<《패스트푸드의 제국》, 《맛있는 햄버거의 무서운 이야기》의 저자>에게 한 정부 관리는 미국의 비육장을 “사람들이 배설물을 담아둔 단지와 쓰레기를 거리 밖으로 내던져 온갖 병이 창궐하던 중세 유럽의 지저분한 도시”에 비유했다.

이렇듯 위험하지만 값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한국의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패재를 부를 것이다. 이번에 수입이 허용된 선진회수육(뼈를 고압으로 짜서 분리한 살점으로,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이 섞일 수 있다)은 주로 다진 고기에 포함돼 햄버거 패티나 미트 토핑·소스 등 패스트푸드 재료로 광범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윤을 좇는 속성상 기업들은 식품 안전을 외면하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맥도날드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현재로는” 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홈에버가 그랬듯 기업들이 원산지를 속여 팔지 말란 법도 없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은 패스트푸드를 더 위험한 음식으로 만들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보여주는 의료 민영화의 ‘미래’

조명훈

최근 ‘촛불’에 놀란 이명박 정부는 “수도, 의료보험, 고속도로는 민영화 불가”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동시에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등 뒷문을 열어놓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대형 병원과 보험사들의 배를 불릴 것이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권은 갈수록 사각지대로 내몰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 악몽 같은 우리의 미래가 곧 자신의 현실인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한국에서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을 도맡아 온 이주노동자들이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4년이 다 됐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오히려 늘어 1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도 매년 수만 명을 ‘인간 사냥’해 강제 출국시켜 만들어 낸 수치다.

이들이 ‘불법 인간’으로 낙인찍힌 것은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 때문이지 절도나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이 ‘불법’이라는 신분 때문에 모든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돼 있다.

소외

심지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조차 겨우 60퍼센트 정도만이 건강보험 카드를 받았다(〈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보건 복지 현황〉, 홍승권). 사측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건강보험 가입을 나서서 해 주지 않는 것이다.

네팔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A씨는 한국에서 다닌 첫 직장에서 페인트칠을 했다.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직장

을 옮기고 나서 얼마 뒤 코가 심하게 막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A씨는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고 한 번에 보통 3천 원이면 될 진료비를 갈 때마다 2만 원 넘게 내야 했다. 나중엔 간단한 수술을 받는 데도 70만 원이나 들었다. 산재 처리라도 받고 싶지만 미등록 신분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은 보통 하루에 10~12시간씩 일한다. 게다가 대부분 주6일제 근무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장에게 근무중 병원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심지어 병원에 가려고 하루 결근을 하면 악랄한 사업주들이 3일치 임금을 깎기도 한다. 이런 조건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아파도 웬만하면 참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흔하다.

또 다른 미등록 이주노동자 B씨가 이런 경우다. 그는 몸이 아팠지만 일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뒤 폐암 판

정을 받았다. 병원은 B씨에게 입원비와 수술비가 포함된 수백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했다. 사측은 병원비를 보조해 주긴커녕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그를 해고했다.

물론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편이다. 어쨌든 법률상으로는 4대 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만들어 낸 이런 작은 성과마저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지금 전국을 뒤덮고 있는 촛불은 더욱 활활 타올라야 한다. 그래서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고 ‘아프고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등록 이주노동자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든 ‘아프고 돈 없어도 치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 민석준 씨 인터뷰

“이명박 퇴진이 가장 근본적 의제가 돼야 합니다”



6월 19일 광주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주최한 ‘1차 국민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 민석준 씨(필명 ‘다른생각’)는 촛불 운동이 이명박 퇴진을 내걸고, 광주병 쇄고기를 넘어 의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민석준 씨를 만나 촛불 운동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인터뷰했다.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학원 강사고요. 웹서핑을 하다가 ‘안티 이명박’ 카페를 알게 됐고요.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번 추가협상에 대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오히려 더 애매하게 만들고 왔죠. 이미 미국과 우리가 말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일시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강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명박 정부가 일관되게 속이고 눈가림하고 기만해 오히려 더 불을 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는 얘기 사탕 주는 것만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퇴진을 전면에 내걸 것인가가 쟁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대책회의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라서 한 가지 쟁점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진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책회의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범국민대책회의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체들의 외연을 확대하고 재야 인사들을 참여시키고 여러 부문의 운



싸우려는 사람들의 활력을 이명박 퇴진 요구로 결집시켜야 한다

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21일의 구호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광우병 재협상해라, 못 하면 퇴진해라’ 하고 외쳤죠.

‘이명박 퇴진’에서 오는 거부감을 걱정하면서 ‘이명박 정부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호는 직접적이어야죠.

상당수 국민이 퇴진에는 반대하고 있어 퇴진 구호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언론 개혁 등 사회구조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정부가 출범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퇴진 여론이 40퍼센트나 된다는 게 더 큰 거죠.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1년도 못 채웠는데 국민의 40퍼센트나 퇴진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50퍼센트의 국민들이 너무 놀라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쇄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여론과 퇴진 여론이 갈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발적으로 맞서자는 주장도 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언론 통제를 일단 막자는 식으로 [운동이] 의제에 따라 끌려 다니게 되면 저들의

술수에 놀아나게 됩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전반적이고 뚜렷한 전선을 그어 줘야 저들과 대치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중고등학생들도 더 이상 이명박 정부를 봐줄 수 없다고 보는데 퇴진에 대해 회의론이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책회의의 의제 확장과 이명박 퇴진이 연결돼야 하는 것이고, 퇴진이 가장 근본적인 의제가 돼야 한다는 거죠.

국민투표나 국민소환제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재신임을 묻는다거나 소환제를 통해서 [이명박의] 팔다리를 끊는다는 것도 다 좋은 생각인데요, 제가 좀 가우뚱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국민투표를 얻으려면 퇴진을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소환제를 얻으려면 국민들이 더 큰 것을 원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국민투표를 얻으려면 우리가 퇴진을 외쳐야 가능하다는 거죠.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미 합법적인 틀을 벗어난 정부이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고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야죠.

애초부터 국민투표를 목표로 하면 [이명박 정부는] 그보다 못한 것을 제시할 것이라는 거죠.

“퇴진은 수사(修辭)”였을 뿐이라는 얘기도 있고, 몇몇 지식인들은 ‘헌정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노출된 분들이 ‘퇴진은 수사’라고 말하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뒤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함께 연대해 왔던 몇몇 단체나 국민에 대한 배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정질서라는 얘기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한을 어기는 것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을 무너뜨린 정부이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먼저 무너뜨린 거죠. 이명박 정부를 용인해 주는 것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헌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부를 다시 세우는 게 오히려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이 운동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점을 지적해 주시죠.

우선은 중앙 단위의 투쟁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토요일[21일]에도 대책회의가 마이크를 들고 “우리는 해가 뜰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기가 솟아오르고, 마이크가 조금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이 조금 뒤로 물러났던 것을 보면, 투쟁의 현장은 하나의 기 싸움이죠.

이런 힘을 되살리고 함께 응집시켜 내는 중앙 단위의 힘이 더 조직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회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도 비난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나아가자는 격한 제안이거든요. 대책회의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상황인데, 고민에 대한 수위를 좀 높여서 조직 자체와 그 목표성을 개편하고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한 대책회의는 남아 있는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이미 국민들의 의지는 넘쳐났습니다. 대책회의가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응집력으로 지켜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넘을 때 함께 넘어야죠.

지금의 운동 자체가 이미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바꾸거나 물줄기를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책회의가 이들에 눈을 맞추고 함께 선도적인 투쟁을 벌이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 정리 강동훈

» 1면에서 이어짐

그러나 운동 내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대외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하고, 제도권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머뭇거리다. 이처럼 숨을 고르는 사이에 이명박과 우파는 반격을 시작했다.

소설가 이문열이 촛불 ‘내란’에 맞선 “의병”을 선동한 후 우익 단체 회원들의 폭력적 난동이 뒤따랐고, 언론·인터넷 통제 조

치가 강화됐다. ‘불순한 운동권’과 ‘순수한 시민’이라는 이간질도 다시 시작됐다.

특별 기자회견과 추가협상이라는 대국민 사기극 이후,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는 “여론이 극적 반전되고 있고 ... [곧] 쇄고기 정국이 종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리고 이명박의 신공안정국 조성 시도와 고시 강행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더 밀리면 정권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한겨레〉)와 인터뷰한 한나라당 핵

심 당직자는 절박함도 깔려있다. 극우파 조갑제는 “이명박의 인천상륙작전”에 환호하면서도 “섣부르게 했다가는 역공을 당한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심의 소나기가 그쳤다’는 것은 이명박의 착각이거나 희망 사항일 뿐이다. 6월 21일 10만 촛불은 촛불 항쟁의 잠재력을 다시 보여 줬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친 이명박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에 도

전하고 있다. 이런 미친 정부와 정책들에 맞서는 것은 자유국가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이제 고시 강행을 신호로 거대한 촛불의 바다와 함께 노동자 파업이 거대하게 몰아쳐야 한다.

‘747’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서민경제 파탄만 남은 이명박에게는 ‘7.4퍼센트 지지율에 7월 조기 퇴진’이라는 새로운 ‘747’만이 정답이 돼야 할 것이다.



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가

추가협상 - 또 하나의 기만

정부가 '추가협상'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90점짜리라고 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우선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품질체계평가(QSA)프로그램을 도입했고 30개월 미만에서도 '대부분'의 광우병특정 위험물질(SRM)을 실질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추가협상은 미국 기업들이 알아서 추진했다가 알아서 그만 둘 수 있는 강제성이 없는 조치이고 게다가 원래의 수입고시, 즉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으로 가는 과도기적·일시적 조치다.

이번에 받아 온 QSA 프로그램은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이 잘 지적했듯이 한국에서 시행되는 품질관리 프로그램인 '품'자 도장을 하나 받아 온 정도일 뿐이다. QSA는 정부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업이 상품 가격을 높이려고 입안·운영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1년에 두 번 조사를 나가 확인하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미국 정부(USTR)도 6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추가협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논의'(discussion)였을 뿐이며 이번에 이야기된 것은 정부 간 협약이 아니라 '한미 수출입업자 간의 상업적 협약'에 대한 양국 정부의 지원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시한부 조치

미국 정부의 보도자료는 또한 QSA 프로그램이나 일부 SRM 수입 잠정중단 조치도 4월 18일 수입위생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경과 조치"라는 점을 밝혔다.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시행하는 시한부 조치라는 것이다.

QSA 프로그램 자체가 기업이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민간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미국 기업이 이만하면 됐다고 판단하는 시기가 바로 원래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으로 가는 시기이다.

길어야 1년간의 시한부 조치, 그 후에는 원래 고시대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가는 것이 이번 '추가협상'이다. 그리고 1년짜리 임시 조치의 실효성마저 미국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 이번 추가협상의 진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이란 게 뭐 다 이렇다.

게다가 이 길어야 1년짜리 임시 조치마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양보한 것이 없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기 전 한국에 수출한 미국산 쇠고기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뼈 없는 살코기가 55퍼센트, 갈비가 35퍼센트

트, 나머지 곱창, 회수육, 내장, 사골, 꼬리뼈, 혀 등이 10퍼센트다.

원래 수입되던 살코기를 빼면 미국의 축산업계가 새로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은 갈비가 4분의 3, 나머지가 4분의 1 정도라는 이야기다.

한국 수입업자들은 원래 이번 협상에서 30개월 미만의 갈비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었다. 갈비만 열어도 미국의 최대 기대 수준의 75퍼센트 정도를 주는 협상이었다.

그러나 미국 거대 농식품기업의 탐욕과 한미FTA를 향한 한국 정부의 2중주는 나머지 25퍼센트까지도 모두 내 주는 협상을 했다. 광우병 위험부위이거나 이 부위가 포함돼 있어 가장 위험한 곱창과 내장, 회수육(AMR), 사골뼈, 꼬리뼈, 분쇄육, 혀 등이 모두 허용됐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추가협상'에서조차 이러한 전면 개방은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이다.

즉, 소의 월령이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는 미국 기업이 알아서 할 뿐이고 광우병 위험부위인 나머지 모든 부위가 수입된다는 것은 추가협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머리뼈, 뇌, 안구, 척수는 제외한다고 하지만 정부 말을 다 믿더라도 이 부위는 한국 사람이 먹지 않는 부위다. 결국 추가협상으로 미국 거대 축산기업들이 돈을 더 쓸 부분은 자신들이 알아서 여기저기 불일

'30개월 미만 소'라는 딱지밖에 없다. 이 딱지값은 1만 원에 1천 개 정도 한단다. 10원이란 이야기다.

미국 기업이 '양심'에 따라 어떻게 딱지를 붙이건 미국 정부가 1년에 2번 조사를 할 뿐

살코기 수입만 허용했을 때조차 등뼈가 발견됐다. 그런데 '자율규제'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미국 기업이 '양심'에 따라 어떻게 딱지를 붙이건 미국 정부가 1년에 2번 조사를 할 뿐

살코기 수입만 허용했을 때조차 등뼈가 발견됐다. 그런데 '자율규제'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살코기 수입만 허용했을 때조차 등뼈가 발견됐다. 그런데 '자율규제'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살코기 수입만 허용했을 때조차 등뼈가 발견됐다. 그런데 '자율규제'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살코기 수입만 허용했을 때조차 등뼈가 발견됐다. 그런데 '자율규제'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살코기 수입만 허용했을 때조차 등뼈가 발견됐다. 그런데 '자율규제'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살코기 수입만 허용했을 때조차 등뼈가 발견됐다. 그런데 '자율규제'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살코기 수입만 허용했을 때조차 등뼈가 발견됐다. 그런데 '자율규제'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살코기 수입만 허용했을 때조차 등뼈가 발견됐다. 그런데 '자율규제'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살코기 수입만 허용했을 때조차 등뼈가 발견됐다. 그런데 '자율규제'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살코기 수입만 허용했을 때조차 등뼈가 발견됐다. 그런데 '자율규제'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살코기 수입만 허용했을 때조차 등뼈가 발견됐다. 그런데 '자율규제'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살코기 수입만 허용했을 때조차 등뼈가 발견됐다. 그런데 '자율규제'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살코기 수입만 허용했을 때조차 등뼈가 발견됐다. 그런데 '자율규제'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살코기 수입만 허용했을 때조차 등뼈가 발견됐다. 그런데 '자율규제'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살코기 수입만 허용했을 때조차 등뼈가 발견됐다. 그런데 '자율규제'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

이코 한국 정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미국에게 문제 제기 할 권한만 있을 뿐이다. 도축장 승인권이나 취소 권한이 한국에 없으므로 한국 정부가 현지조사를 해 봤자 할 일이 없는 것은 추가협상 전이나 후나 똑같다.

추가협상이 90점짜리라고? 내가 보기에 99점짜리다. 한국 국민에게가 아니라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에게 말이다. 여기에 길어야 1년 뒤 1백 점에 되는 99점짜리 점수인데 더 바랄 게 무엇일까? 미국 정부는 지금 추가협상대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 추가협상을 통해 한국 국민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곱창과 막창, 회수육, 사골뼈와 꼬리뼈, 혀 이 모든 것을 다 먹어야 한다. 곱창? 소의 창자가 곱창이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소장과 대장 전체를 연령과 무관하게 SRM으로 지정한 것은 괜히 한 것이 아니다. [변형 프리온이 축적되는 부위로 알려진] 파이어즈패치(Peyer's patch)가 소장 전체에 분포하며, 대장도 감염력이 있다는 것을 2006년에 영국 의학 연구원과 런던대학교가 확인했다.

허? 유럽과학위원회에서 올해 펠런 보고서에는 해에 SRM인 편도조직이 붙어 있어 금지를 권고했다. 혀 요리로 유명한 프랑스에서조차 혀가 실질적으로 금지됐다.

회수육? 회수육에 SRM인 척수조직이나 등배신경절 등이 포함돼 미국 학교 급식에서 배제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꼬리뼈는 아예 그 자체가 등뼈의 일부분으로 SRM이고 사골뼈는 미국에서는 식용도 아니며 등뼈에서 추출된 사골뼈도 한국에 수입된다.

자. 이제 추가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어떤 음식이 문제가 될까? 곱창이 들어가는 곱창과 여기에 등뼈를 넣은 설렁탕, 회수육과 분쇄육이 주로 쓰이는 피자·햄버거·소시지·핫도그, 혀 요리가 들어가는 수육과 편육, 꼬리곰탕과 사골국, 그리고 이 모든 수입허용 부분을 재료로 하는 쇠고기 유래 제품이 다 문제가 된다.

결과 추가협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누가 소 눈알을 먹지 않겠다고 주장했나? 추가협상은 막아야 할 부분은 하나도 막지 않았다. 추가협상 전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추가협상 후, 이제는 'QSA' 딱지만 붙이면 광우병 의심 소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청소년 기고

우열반 — “창피해? 그럼 공부해”

우리 학교는 우열반 수업을 한다. 보충수업은 물론, 정규수업도 교실을 바꿔 가며 진행한다. 정규수업은 A반과 B반으로, 보충수업 시간에는 12등급으로 나눠어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성적순 지원 우리를 더 미치게 하는 우열반으로 보충수업 반을 나누다 보면, 참 우울한(?) 상황이 일어난다. 친구와 반을 비교해 보고 자신이 더 낮아진다고 하위권에 있으면 적잖은 열등감이 드는 것이다. 또 하위권 반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의 꾸지람은 학생들에게 더욱 큰 패배의식과 상실감을 준다.

우열반 보충수업을 하면서 지원 우리는, 선생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렸다.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고, 열등감을 느낀다고. 그러나 돌아오는 부장 선생님의 한마디는 우리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왜? 창피해? 그럼 공부해.”

그 논리라면 우리들에겐 자존심따위는 없고 공부나 하라는 말이다. 어리다고 자존심마저 없을까?

언제까지 우리들을 성적순으로 나누고 또 나눠야 성이 차겠는가? 우리들은 차별받지 않고 한 교실에서 다 같이 공부할 권리가 있다.

송조은(고등학교 1학년)

화물연대 파업의 승리와 아쉬움

2008년 6월 촛불 항쟁 한가운데에서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보여줬다.

컨테이너들이 쌓이면서 항구가 마비됐고 공장이 멈추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파업이 낸 효과에 놀라 허둥대며 발난 동동 굴렀다. 이명박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까지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협박했지만 노동자들은 꺾여도 하지 않았다. 화물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비조함원들이 대거 파업에 동참했고 화물연대에 가입했다.

국민적 지지

촛불시위는 화물연대 파업에 큰 자극제가 됐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운송 거부 선언으로 뜨거운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파업에 돌입하자 지지는 더 뜨거워졌다. 포털사이트에서 ‘화물연대 파업 응원 서명’까지 벌어졌고 생수·초코파이 등을 들고 화물연대 사무실을 찾는 시민들도 많았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 표준요율제 도입 약속 등을 얻어 내며 승리했다. 조합원도 2천여 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더 싸워 더 많은 것을 얻어 낼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도 있다. 부산의 경우 노동자들은 운송료 19퍼센트 인상에 만족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울산 카게리어 노동자들과 화물연대 광주지부 조합원들은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지 않은 지역도 많다. 아직 타결되지 않고 파업중인 곳도 많다. 매번 정부가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경험을 떠올린다면 파업을 더 유지해 확실한 보충 약속을 받아 낼 필요도 있었다.

더욱이 화물연대 지도부가 이명박이 가장 위기에 빠진 그 순간에 파업을 해제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소중한 승리는 경제 위기 시대에도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우면 승리할 수 있음을 웅변한다.

김여진



2004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입법 열망을 내걸었던 국회

누구의 국회인가?

안형우

〈조선일보〉는 6·10 1백만 시위 이후 “항의 표시는 충분히 했다 … 이제 정부를 지켜보자” (6월 11일자 사설)고 가증스럽게 말했다. 전 대통령 김대중을 인용해 “국회에 들어가 싸우라”며 야당의 등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리 편에도 비슷한 주장이 있다. 보수 정치를 잘 비판해 온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는 고별 강연회에서 “사회 현안마다 촛불을 들 수는 없다”며 “여러 사회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지속적 체제인 대의민주주의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 최선의 체제”라고 말했다. MBC나 KBS, 〈경향신문〉의 최근 등원 촉구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와 맥락이 같은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근본적으로 대중 시위는 ‘일탈’이고 의회 등 제도권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정상’이라는 관점에 기초한다.

그러나 기업이 정당들이 득세하는 국회는 운동의 요구를 반영해 개혁을 이루기보다는 운동의 성과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그럴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이다. 〈조선일보〉가 왜 등원을 촉구했는가?

최초의 한국 국회는 친일·친미주의자들이 주도했다. 한민당의 후신 민주당은 4·19혁명의 여파로 국회 2백20석 중 1백99석을 얻으며 개혁 기대를 받았으나 데모규제법과 반공임시특례법 등으로 되려 운동을 탄압하다가 결국 5·16쿠데타에 운동의 성과를 무기력하게 내줬다.

1987년 6월항쟁 때도 김영삼·김대중이 이끄는 야당인 통민당은 투쟁이 견장을 수 없이 커져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려 하자 군부와 타협에 기대를 걸면서 투쟁의 길을 배곤 했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돼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돼야만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독자편지

letter@counterfire.or.kr

지면 관계상 실리지 않은 독자편지나 소식/보고는 온라인에 실립니다. 6월 30일(월)까지 독자편지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편지를 환영합니다

한 달 이상 계속된 촛불집회의 생생한 경험이나 이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을 <맞불>에 보내 주세요. 촛불집회 비난, 조중동의 왜곡 개인적으로 느낀 것도, 경험한

것도, 같이 참가한 지인들과 나는 이야기 등 어떤 것이든 환영합니다. <맞불>은 정부의 촛불집회 비난, 조중동의 왜곡 등에 맞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독립적인 언론입니다. 촛불집회 참가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맞불>에 직접 실어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여

러분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letter@counterfire.or.kr 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거나 <맞불> 웹사이트(<http://www.counterfire.or.kr>)의 ‘독자편지 쓰기’ 탭을 클릭하세요.

넓은 집시법이 저의 정당성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2월, 유병문 당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돼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 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됐다. 나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부당한 연행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다. 단지 항의 방문을 했을 뿐인데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우리를 연행했다.

최근에 나는 이 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재판을 받았다.

검사는 내가 신고되지 않은 옥외 야

간 집회에 참가해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당당하게 나를 변호했다.

“요즘 촛불시위에 참가해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신고되지 않은 옥외 야간 집회에 서울 도심을 행진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것은 위대한 거리의 민주주의지 불법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현행 집시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또한 나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운

동 탄압에 항의한 것인데 국가보안법 역시 21세기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법이다” 하고 진술했다.

판사는 “정당성에 대해서는 잘 알겠” 다면서도 나에게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나는 이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촛불 운동의 전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구병준

TV 프로그램

<커밍아웃>을 보고

성소수자가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방송을 통해 커밍아웃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커밍아웃>이 케이블 채널 tvN에서 방영되고 있다.

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 온 과정에 대해 얘기하고 커밍아웃하는 것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간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솔직하고 싶은 마음, 정체성을 깨닫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는 답답함, 커밍아웃에 대한 반응은 성소수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커밍아웃>은 성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도 꽤 진지하게 접근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에서도 드러나지만 커밍아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커밍아웃을 했다가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끔찍한 경험 —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려가거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두들겨 맞거나 하는 — 을 하는 일도 흔하다.

당연히 누군가 커밍아웃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를 지지하고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억압과 차별을 개인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현실에서 커밍아웃을 단지 개인의 선택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된다. 동성애자 억압은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 속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을 벽장 속에 가두는 체제에 맞서 집단적으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커밍아웃이 편견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회에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고 편견에 도전하는 방식이 언제나 개인적 커밍아웃일 필요는 없다.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도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커밍아웃> 같은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것을 보며 어떤 이들은 격세지감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이런 변화는 동성애라는 용어조차 낯설던 시절부터 용감하게 편견에 맞서 싸운 동성애자 운동 덕분에 가능했다.

이나라

정통 사회주의 정당이 가능할까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요즘 촛불 정국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는 ‘다함께’라는 단체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궁금한 게 많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개량주의를 반대하고, 노동자의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자고 하시는데 그럼 지금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 또 그들과의 관계 설정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조차 뿌리내리기 어려운 남한 현실에서, 정통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어 대중 속에 파고드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철

다함께에 가입하세요!

활동 소개 및 안내, 회원가입, 후원하기 등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 으로 연락주세요. 다함께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강연회, 거리 가판에서도 얼마든지 물어 봐 주세요.

조중동 같은 기성 언론은 진실을 은폐하려 합니다. 우리가 흠어진 개인이라면 부당한 권력에 맞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함께는 이 사회의 감춰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주간 <맞불>을 발간하고,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또한 거리와 대학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대중 행동을 함께하면서, 자본주의가 낳는 온갖 불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명박에 맞선 저항이 승리하기 위해선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셔서 여러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해 보세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에 함께합시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8(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www.alltogether.or.kr

‘다함께’는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과 2000년 프랑스 니스에서 있었던 국제 반자본주의 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였던 ‘투장상블’(Tous Ensemble)에서 따온 이름으로, 다양한 운동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뉴욕까지 번진 촛불

지난 6월 7일 뉴욕 맨하탄의 코리 아타운에서도 촛불집회가 열려 교민과 유학생, 일부 미국인 등 약 2백 50명이 참가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참가한 가족부터 어린이, 학생,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의 촛불시위 지지라는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뿐 아니라 “한미FTA 반대”, “의료 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발언과 팻말을 통해 표현했고, 특히 한국 정부가 평화로운 시위를 무력 진압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집회장 주변에는 한국의 촛불시위와 정부의 무력 탄압을 보여 주는 사진들이 전시돼 지나가는 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한국의 시위 영상은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많은 유학생과 한국 교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한국의 시위 소식을 확인하며 멀리서나마 함께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미친 소 수입 반대 리본 달기, 지지성명서 발표, 한국의 시위대에 김밥 보내기 모금을 인터넷 상으로 전개하고 있고, 조중동 광고주들에게 이메일과 국제전화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한국 촛불 지지 시위는 뉴욕뿐 아니라, 워싱턴, 애틀란타, 시애틀, LA에서도 열렸습니다.

미국에서도 미국 정부의 쇠고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6월 20일치 기사에서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광우병 전수조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는 걸 알고 있다”고 미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LA타임스>도 비슷한 논조의 사실을 실었습니다. 끝까지, 뭘 때까지 함께 싸웁시다.

남수경

주성영의 지역구 대구에서도 촛불은 타오른다

대구에는 고소·영·내각의 한 축이기도 하고, ‘천민민주주의’ 등 막말을 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뽑아 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구에서도 5월 3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십 차례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추가협상이 발표된 6월 21일 집회에서는 처음으로 <맞불> 호외를 배포했다. 부정적 반응을 걱정하기도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한 시민은 호외를 받고서 “드디어 대구에도 맞불이 등장하는구나!” 해서 <맞불>을 아냐고 하니 “그럼요. 유명하잖아요”라고 답했다.

시위대는 “이명박은 물러가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주성영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활기차게 행진했다. 교통이 혼잡했음에도 박수치며 호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첫 번째 목적지인 대구 시청에 도착해 진행한 자유발언에서는 낙동강운하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명박이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

지만 대구시장은 여전히 낙동강운하를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또 “대구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대구 시와 의회는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언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주성영을 규탄한다”

행진은 주성영 의원 사무실로 이어졌다. <100분 토론>에서 주성영 의원의 발언 때문에 대구 시민의 분노와 수치심은 극에 달했다. 자유발언에서는 그날의 발언뿐 아니라 뺑소니와 폭력 시비로 얼룩졌던 그의 추악한 과거에 대한 집중적인 성토가 이어졌다. 엄청난 함성과 야유가 사무실 인근을 뒤덮었다. 한 시민은 주성영 의원 사무실 앞 ‘도시락 폭탄 시위’를 앞으로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모두 크게 자신감을 얻고 고무됐다.

송상운

부자들만을 위한 미래는 안 된다

열 살짜리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주부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전화로 의견을 보내 왔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개천에서 용 난다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갔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씩 개인 교수에게 고액 과외를 하는 애들과 경쟁하는데 서민들이 게임이 되겠는가?

게다가 교수들과 돈 많은 사람들, 한나라당은 기부금입학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이 사립 초중고 수백 개를 만들려고 작정했다. 특목고도 수백 개 만들려고 한다. 부자들은 가난한 애들과 같이 교육시키는 것 싫어한다.

서울시는 대형건물(쇼핑센터, 백화점 등)

에 자가용 끌고 들어가면 교통분담금 4천 원씩 받는다고 발표했다. 내가 서울시에 전화해서 따졌다. “부자들만 편하게 다니고, 대다수 국민들은 다니지 말라는 것 아니냐”, “우

<맞불> 92호 건설 노동자 파업 기사를 읽고

촛불의 힘은 건설 노동자의 파업에 힘을 실어 줬고, 그런 면에서 [건설기계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해 2만 5천 명이 시위한] 당일 촛불시위에 합류하지 못했던 것은 나도 안타깝다.

[그러나] 건설노조의 투쟁은 상경투쟁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상경투쟁 이후 투쟁이 ‘시작’이다. 현장에서 고전하면 상경투쟁으로 전환한다든지 투쟁

리 국민 모두의 땅인데 이게 말이 되냐? 자동차 팔아먹으려고 안달일 때는 언제고, 자동차 몰고 다니면 돈 물겠다고?”

그동안 먹고 사느라 바빴는데 이번 촛불시위를 경험하면서 내 생각을 밝히고 싶었다. 기성세대로서 많이 부끄러웠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

전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상경투쟁 해서 법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 주고, 현장으로 내려가서 현장별로 적용 투쟁을 벌인다. 그것을 “산개해 힘을 분산시키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나는 <맞불>이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기사를 쓰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재희

“왜 그딴 신문을 봐?”

얼마 전 지하철 안에서 <조선일보>를 펼쳐 사실을 읽고 있었다. 그 때 옆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께서 “젊은 양반이 왜 그딴 신문을 봐?” 하고 버럭 역정을 내셨고, 순식간에 승객들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그 싸늘하던 시선이란 참.

내가 할머니에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도 조중동 참 싫어하는 사람인데, 다른 신문 기자라서 조중동 비판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읽고 있었어요” 하고 말하자, 오해가 풀렸는지 할머니는 아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미안하다고 했고,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던 승객들은 킁킁대며 웃었다.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숨어서 봐야 하는 신문, 이게 요즘 조중동의 현실이다.

한수영

지난 호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 FLY님께

전쟁과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맞불> 92호 독자편지 ‘사회주의가 대안이고 가능할까요?’에서 FLY님은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지만, 자본주의 자체를 없애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전쟁은 자본주의 체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자본들은 흔히 경제적 경쟁 과정에서 자국의 군사적 보호와 무력 호소에 의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주먹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병폐들을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케인스주의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1970년대 세계 경제 위기가 도래했고, 지배자들은 케인스주의적 처방을 헌신짝 버리듯이 폐기하며 30여 년간 대중이 그나마 누린 복지혜택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지요. 즉 체제의 근본 속성을 건드리지 않은 채, 민중의 삶을 영구히 향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진짜 사회주의

FLY님의 말대로 “지금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은 진짜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옛 소련과 북한 사회에서는 국가 관료가 모든 생산수단을 통제하고 노동자들은 관료 밑에서 착취당했습니다. 이런 사회는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없는 ‘국가자본주의’ 사

회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과 정치권력을 직접 통제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비록 스탈린의 반혁명으로 사라졌지만, 1917년 러시아 혁명 직후의 러시아는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를 힐끗 보여 줬습니다. 혁명 과정에 건설된 소비에트(노동자 평의회)는 노동자 민주주의의 진정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수 세기동안 여성을 억눌렀던 여러 법률들의 즉각 폐기, 정부 관리 봉급을 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으로 제한 등 획기적인 조치들도 단행했습니다.

21세기에도 자본주의의 불안정으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세계 곳곳에서 민중의

거대한 반란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은 단지 목표가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는 사회주의자와 자본주의의 온갖 폐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 하신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영익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웹사이트에서도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counterfire.or.kr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백은진)

지난 23일 뉴코아 · 이랜드 파업 1주년 집회에 참가한 뉴코아 · 이랜드 조합원들



비정규직 악법 시행 1년과 확대 적용

비정규직 악법을 이명박과 함께 쓰러기통으로

오정숙

지난 6월 23일 뉴코아 강남점 앞에서는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의 파업 승리 결의대회가 열렸다. 꼭 1년 전과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요구를 내걸고 말이다.

비정규직 악법이 시행된 지난 1년은 59퍼센트라는 낮은 고용률, 청년실업률 8퍼센트, 비정규직 8백61만 명이라는 열악한 현실을 남겼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았다는 점은 정부 발표로도 이미 입증됐다. 통계청이 3월에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비정규직 중에서도 그나마 처지가 나은 기간제 노동자는 줄어든 반면,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시간제 노동자와 호출 노동자(일감이 있을 때만 일하는 노동자), 용역 · 파견 노동자들은 급증했다. 기업주들이 기간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파견 · 용역 등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외주화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쥐꼬리만큼 올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는 IMF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50.1퍼센트).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 1위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악법이 7월 2일부터 1백 인 이상 3백 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을 앞둔 현재, 지난해 이랜드 사태와 꼭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무더기 계약 해지가 벌어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두 달 앞두고 해고됐다. 심지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2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들까지도 해고됐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첫 제물이 된 것이다. 농협중앙회 역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해 온 노조 지부장을 계약해지했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 [비정규직 법을] 개정하

는 게 불가피한 시점"(노동부 장관 이영희)이라며 비정규직 악법을 더욱 개악하려 한다.

경제5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정부의 안은 기간제와 파견제 사용기간 3~4년으로 연장, 파견업종 대폭 확대, 변형근로 시간제 1년 단위로 도입, 해고 요건 완화 등으로 점철돼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악법 확대 적용과 개악 시도는 뉴코아 · 이랜드, 기륭전자, 코스콤, KTX 등의 영웅적 노동자 투쟁이 보여줬듯이 십중팔구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확대 적용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인 공공노조, 사무금융노조 등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정규직 노조인 국민은행지부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추진 중이다(노조 설문조사에서 정규직 노동자

의 76퍼센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든든한 원군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촛불시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기에 더할 나위 없는 호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촛불집회로 비정규직 문제가 가려졌다'고 봐선 안 된다.

적어도 기층 수준에서 촛불시위는 광우병 쇠고기를 넘어서 경쟁 교육, 대운하, 민영화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반대로 사실상 확대됐다.

지난해 단호한 투쟁을 벌인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폐단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국민 80퍼센트의 지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들은 거의 다 지금 촛불시위를 지지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대부분 자신이나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비정규직인 사람들일 것이다.

비정규직 투사들은 촛불시위에 일체감을 갖고 이 속에서 "의제를 확대"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저 · 항 · 운 · 동 · 의 · 축 · 제

맞시름2008

맞시름 2008은 40여 개의 토론회와 진보적 영화, 음악, 사진전 등이 어우러지는

저항운동의 축제이자 대안을 모색하는 장입니다.

맞시름 2008에서는 촛불 운동의 주도적 참여자들, 국내외 반전 · 반신자유주의 활동가들,

진보적 지식인들이 연설할 것입니다.

맞시름 2008에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촛불 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운동의 방향과 더 나은 사회의 대안을 함께 모색해 봅시다.

주요 연사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농민운동가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우석균 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정책자문위원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정책자문위원 김지윤 고려대 학생/토론회에서 한승수 총리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일명 '고대녀' 강양구 <프레시안> 과학 · 환경 담당 기자/황우석 사기극을 들춰낸 언론인 김수행 맑스주의 경제학자/사회과학아카데미 대표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이강택 'KBS 스페셜' PD/광우병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한 언론인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부지부장 이희수 한양대 문헌인류학과 교수/<이슬람>의 저자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계간 <마르크스주의 연구> 편집위원장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초대의 연사

조너선 닐 아동문학가/대안세계화운동가 이언 버철 영국의 맑스주의 역사가 버지니아 로디노 미국 반전 단체 '평화정의연합' 국제연대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최_다함께

일시_ 8월 14일(목) ~ 17일(일) | 장소_ 고려대학교

참가문의_ 02-2271-2395, atgmail@nate.com, http://www.alltogether.or.kr